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3월

## 전문가 기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시각,  
운영에서 관리로 관리에서 성과로

## 주요 이슈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 ESG 동향

EU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내용

## 주요 통계

#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시각, 운영에서 관리로 관리에서 성과로



(주)한국ESG연구원  
신지영 대표이사

## 기업에 대한 ESG 요구는 더 확대될까?

ESG 경영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ESG 공시에 대한 국내외 표준은 비단 1,2년 전보다 진척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ESG 경영에 대한 실질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단 하나의 화수분이 구분짓고 있다. 바로 대기업 고객사의 'ESG 평가 및 실사'요청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치를 구할 수는 없으나, 2022년을 기준으로 필자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들 중 평균적으로 약 30~40% 정도가 고객사로부터 ESG 평가 및 실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2년까지는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 및 실사가 EU의 공급망 실사법(2022.02)에 따라 도입 원년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정책 방향은 대부분 '평가를 통한 수준 확인과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협력사의 리스크는 거래 중단이나 제재 차원으로 논의 수준이 상향될 것이다. 기업의 사업 영역이 넓어질수록 또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ESG에 대한 대외 요구 또한 비례하여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현장에서 바라본 ESG

ESG 평가 및 실사를 경험해 본 중소, 중견기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2022년 내내 각종 채널을 통해 알려져 왔다. 어려움을 호소 이후에는 'ESG 경영을 우리 회사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특히, ESG 평가 및 실사를 경험해 본 담당자는 대외 요구사항 대비 회사의 경영 수준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인력적인 한계로 인하여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다종의 산업과 규모별 기업의 ESG 실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와 정반대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다. ESG 평가에 적용되는 많은 지표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운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피평가 기업들이 말하는 '어려움'을 ESG 평가 지표를 통해 하나 하나 분석해보면, 결국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귀결되곤 했다. 이는 피평가 기업이 대외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ESG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실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평가 현장에서만 드러나는 각종 데이터 조작과 실무 능력 미달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협력사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이 된다. (실제로 ESG 평가 지표수준이 낮은 경우는 기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미비로 인해 사업 실적이 정체되는 모습이 대다수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논의는 먼저 우리 회사의 경영 및 운영 수준의 모니터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냐에 따라 회사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관리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ESG

각종 산업에서 말하는 ESG 경영에 대한 실질성을 논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회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실력을 향상하는 과제를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제품, 서비스가 좋은데 회사의 관리력이 뒤처지는 경우는 그만큼 수많은 잠재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SG 경영이 오로지 친환경성, 친사회성을 추구하는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사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 및 기업 운영 상에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국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연정인 연구위원

최근 글로벌 탄소 무역규범이 강화되고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기업 및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① 탄소배출 MRV 분야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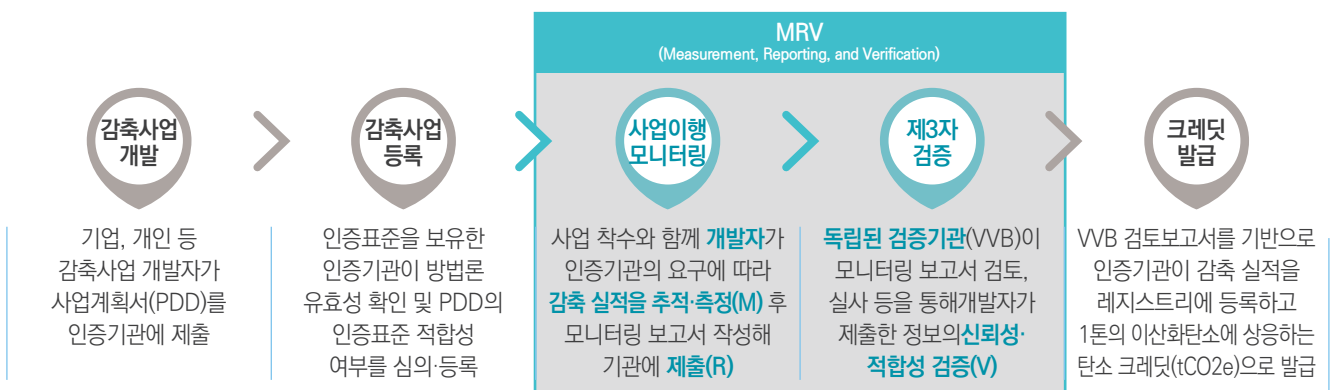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규범적·자발적 탄소감축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해당 지역 내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직간접 배출량 저감 위주였다면, 최근 들어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선언, 브랜드 가치 제고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자율적 탄소 감축이 늘고, 수출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 기업이 탈탄소 국제규범에 대응해 탄소발자국 저감<sup>1)</sup> 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즉 MRV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탄소배출 MRV란 생산·소비·유통 등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탄소배출 총량을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기준에 따라 측정·보고하고, 제 3자 검인증을 통해 보고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탄소배출과 감축에 관한 일련의 모니터링 절차를 통칭한다. MRV는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

지와 같이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청하는 수단(광의의 MRV)'이 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자발적 감축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발행하기 위한 '사전적 검인증 절차(협의의 MRV)'로도 적용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MRV 수요 증가는 곧 기업이 수행한 탄소감축 활동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며, 추가적인 감축 수단과 자금 동원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해 지속적인 감축활동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기업의 의지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MRV 수요 증가는 최근 글로벌 표준 제정과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기업의 탄소배출 모니터링과 보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처리·품질관리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MRV' 분야가 새롭게 등장하며 MRV는 이제 전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판가름 할 게임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다.

## 탄소 크레딧의 발행 과정과 MRV



1) 기업이 공급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소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 또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배출량 총합

② 국내 MRV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과제

지난해 9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관계부처가 서둘러 국내 MRV 제도와 인프라 확충 대책을 고민하게 된 까닭은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역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규제를 본격화하고, 배터리 등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보고와 등급 표시에 대한 의미부여를 예고하는 등 對EU 수출기업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EU와 유사한 탄소 관련 무역조치(CBA)가 대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점점 더 높아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자칫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나 성장잠재력 저하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① 국내 MRV 제도의 국제통용성 확보, ② 국내 MRV 인프라 확충과 검증 시장 간의 역할 확대, ③ 중소기업 MRV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산업계 전반의 신뢰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수출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 기업의 탈탄소화 협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거나 탄소시장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기업 단위 탄소배출에 대한 MRV 역량과 인프라는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MRV 수요 대응의 핵심은 기존에 비규제 대상이었던 ‘중소·중견기업의 MRV 체계 도입’과 제품의 전주기적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탄소발자국 MRV 수준 제고’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율인증 수요에 기반한 탄소발자국 MRV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거나 영향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탄소배출 MRV 강화방안’을 통해 민관이 보유한 기존의 MRV 역량을 보완하고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MRV 생태계에 디지털 기업, 탄소회계·금융시장 조성자 등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MRV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산업계 역시 수출상대국의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MRV 기술 시장 선점, 국제 표준 제언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국내 탄소배출 MRV 인프라 현황

구 분	기업단위 탄소배출량	제품단위 탄소발자국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환경성적표지 인증	국제통용발자국 검증
M/R (측정·보고)	규제 이행 의무 차원에서 조직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업이 측정·보고	정부(환경부) 지침에 따라 기업이 자체 산정한 제품 전주기 배출량 인증 신청	제품 생산자가 국제표준 또는 고객사 요구 기준에 따라 제품의 전주기 배출량을 산정
V (검인증)	단, 환경부가 공인한 민간의 검증기관(13개)의 검증보고서 첨부 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출자료 토대로 배출량 검증해 ‘환경성적표지’ 발급	ISO 등 국제기준을 다루는 공인된 민간 기관이 탄소발자국 검인증의견서 제공

출처 : 관계부처합동(‘22.9.30),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방안’ 참고해 재구성

## EU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내용



박현준 연구원

유럽연합 집행위는 친환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집행위는 4대 추진목표를 필두로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기술 기반 제품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EU 산업규제의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정책당국 및 기업도 그들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년 2월 EU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안은 역내 친환경기술의 경쟁우위, 역외 산업 육성정책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①규제완화·②자금조달 여건 개선·③친환경기술 강화·④무역개방 등을 동 계획안의 주요 추진목표로 책정했다.

먼저 EU는 탄소중립 목표달성 과정에서 기업이 비효율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EU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 수단으로 탄소중립산업법을 이용하여, 정부-기업-투자자간 행정비용과 허가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기술 규제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둘째, 친환경 기술 기반 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AI·탄소중립 기술 등 디지털·친환경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기술 산업을 대상으로 '25.12월말까지 보조금 심사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셋째, 친환경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재·수소·태양광 등 친환경기술 전문 육성기관을 설치하여, 미래인력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역내외간 기술자격 인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EU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이용하여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대비 보다 많은 국가에 무역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23년 여름 전까지 호주와의 FTA를 마무리할 것이며, 이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무역개방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원자재클럽 창설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클럽 가입국간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빠르게 진행시켜, 역내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과 투자매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계획안에서 중점적 역할을 할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의 글로벌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 법안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연계법안

법안명	내용	일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중립 핵심 분야의 생산능력 제고 위해, 규제 간소화 및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법률	23. 3. 16일 발표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보장 위해,역내 공급망 구축 및 강화에 대한 법률	
전력시장 규칙개정	에너지 위기 대응하여, 유럽내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유럽 전력시장 규칙 개혁	별도 추진 전망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 요건 강화	탄소중립 가치사슬 확보 위해,재활용 및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수소·전기 인프라 개발 및 강화 위해,기존 EU 인프라 계획의 실행 및 자금조달 가속화	

출처 : KOTRA(2023.3)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부로, 친환경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EU 역내 생산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30년까지 EU내 친환경기술 연간 수요의 40%를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특히 핵심 친환경기술(①태양광·②풍력 및 해양 그린기술·③배터리·④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⑤수전해장치·⑥바이오메탄·⑦탄소포집 및 저장·⑧그리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자체조달 목표를 속도감있게 달성하기 위해, 규제간소화·투자촉진·인프라 구축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둘째, InvestEU·민간자금조달 프로그램 등 통해 민간 자금 조달을 촉진할 예정이다. 셋째, 직업능력 강화 등 통해 친환경기술 제조역량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친환경기술의 역외 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일자리 및 제품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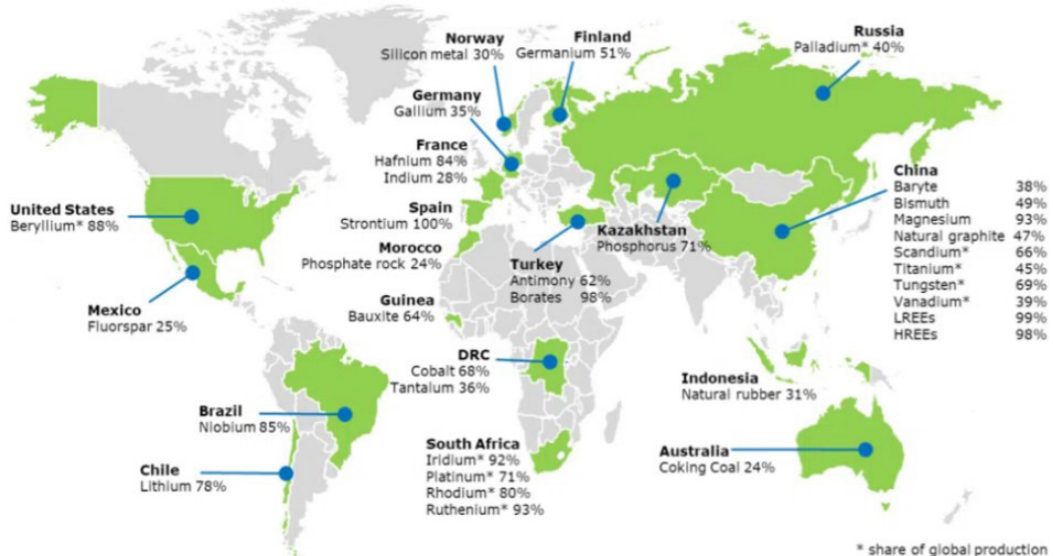
EU 핵심원자재법은 '30년까지 역내 전략원자재(디지털·우주·탄소중립 산업 필수 재료) 소비량의 65% 이상을 중국 등 특정 제3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략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 축소 및 다각화를 위해, 핵심원자재법은 ①원자재공급망 강화 목표설정·②원자재확보 방안·③공급망리스크 관리·④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 법안에는 '30년까지 역내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의 10% 채굴·40% 가공·15% 재활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에게 환경발자국 선언 등 오염물질 관련 수집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전략 원자재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은 '23. 3. 16일자로 초안이 제안되었으며, 향후 의회 및 이사회·3자 합의 등을 거쳐 규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내 핵심 원자재별 수입의존도 현황('20년 기준)



출처 :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the EU's list of Critical Raw Materials"(2020)

# ESG 통계 지표

2023년 2월 28일 기준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녹색채권	172	183	186	188	199	203	201	200	212	212	213	215
사회적채권	835	871	912	946	966	1,006	1,032	1,045	1,069	1,070	1,083	1,103
지속가능채권	237	246	279	304	305	309	308	309	300	299	298	300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녹색채권	173	183	185	186	191	194	193	193	200	200	201	205
사회적채권	1,331	1,362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1,572	1,565	1,576
지속가능채권	182	186	199	213	217	220	219	218	213	213	213	213

## 2. ESG 평가

### 한국ESG 기준원 ESG 평가 등급(ESG 통합 기준)

(단위 : 개사)

연도	S	A+	A	B+	B	C	D	합계
'22	-	5	123	136	96	272	342	1,033
'21	-	13	178	153	285	300	21	1,005

## 3. 기타 통계

### RE100\* 가입 회원 수

(단위 : 개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계(한국 포함)	13	35	24	32	40	63	65	67	58	4
한국	-	-	-	-	-	-	6	8	27	2

\*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 2023.3.1 기준

자료: <https://www.there100.org/>

##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3월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4월 |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5월 | RE100 추진 현황과 과제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8월 |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과 활용방안

9월 | 탄소중립 분야 국가 R&D 현황 및 과제

10월 |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개선과제

11월 |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UN기후변화협약 결과와 의미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연정인 연구위원

T. (02)6050-3147 | E. yeonjungin11@korcham.net

### EU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내용

박현준 연구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

### ESG 통계 지표

한주연 연구원

T. (02)6050-3143 | E. jooyeon@korcham.net